



OECD 빈곤정책 동향

金泰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1. 서론

지난 2000년 9월 유엔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평화와 안보', '개발 및 빈곤퇴치'를 중심으로 하는 밀레니엄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개발 및 빈곤퇴치와 관련해서는 첫째, 외채 과중 부담국가에 대한 외채탕감 프로그램을 조속히 강화하고, 둘째, 2015년까지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을 가진 인구나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를 반감시키며, 셋째, 2015년까지 초등교육 의무화와 남녀학생의 교육 기회 균등을 목표로¹⁾ 설정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²⁾에서는 연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1년 4월 고위급회담에서는 빈곤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설정된 OECD국가를 포함하는 전세계 차원의 빈곤관련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들 회의에서 논의된 OECD의 빈곤에 대한 정책과 방향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밀레니엄정상회담에서는 앞의 세 가지 항 외에 모성사망률을 현 수준의 75%까지 축소, HIV/AIDS, 말라리아, 기타 질병들의 확산 방지, 2020년까지 슬럼가 거주자의 생활을 개선할 것을 결정했었다.
- 2) OECD의 위원회중 개발 빈곤과 관련된 위원회로는 개발원조위원회가 있다. 동위원회는 1961년 9월에 조직된 것으로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OECD국가들의 지원을 장려하고 그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지원예산의 올바른 집행여부와 환경과 인구측면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국민이 인식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동위원회에는 OECD 30개 회원국 중 22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현재 본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2. 빈곤축소와 정책협조³⁾

1) 개 괄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01년 4월 25~26일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는데, 회의의 주요주제는 빈곤축소와 정책협조(Poverty Reduction and Policy Coherence)였다. 이 회의에서는 빈곤축소에 대한 동일한 목적을 지닌 국제기구들인 World Bank, IMF, UNDP가 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1996년 고위급회담에서 결정되고 2000년 새천년 UN정상회담에서 채택된 2015년까지 전세계 절대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목표와 1996년 '21세기의 모습: 개별협력의 기여'(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s)에서 빈곤축소를 위해 설정한 7가지의 국제적인 개발목표(I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시에 결정된 7가지의 국제적인 목표는 복지, 사회개발, 환경분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개발원조위원회에서 결정된 7가지 국제적 개발목표

분 야	세부내용
복지분야	① 2015년까지 현재 전세계 절대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축소
사회개발분야	② 2015년까지 전세계국가들의 초등교육의 보장
	③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통한 여성권리와 양성간 평등향상
	④ 2005년까지 5세 이하 어린이와 유아의 사망률을 현 수준보다 2/3까지 축소
	⑤ 2015년까지 모성사망률을 현 수준보다 3/4까지 축소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쇄신	⑥ 2015년 이전 혹은 가능한 기간에 적정연령 국민들의 제1차 보건의료 체제를 통한 재활서비스 접근 가능
	⑦ 2005년까지 모든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국가개발정책의 수행과 2015년까지 현 자연자원의 손실이 더 이상 없도록 전지구적인 노력

3) 원고의 내용은 OECD, 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2000. 5와 [Http://www.oecd.org/dac/](http://www.oecd.org/dac/)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7가지의 주요정책 목표는 OECD는 물론 UN정상회담,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향후 빈곤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2) '빈곤축소 가이드라인'의 주요원칙

위와 같은 국제적인 목표(IDGs)를 이루기 위해 DAC와 World Bank, IMF, UNDP는 함께 2001년 4월회의에서 '빈곤축소 가이드라인'을 개발·제시하였으며, 빈곤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빈곤의 다원화에 대한 이해

- 빈곤은 과거와는 달리 소비, 식품안전, 건강, 교육, 권리, 안전 등이 포함되는 여러 범위의 박탈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적인 지속성-질병, 기아 등-의 측면에서도 빈곤은 감소되어야 하며, 양성간의 평등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② 주요 정책과제와의 일치

- 빈곤축소는 국가개발에 영향을 주는 정부정책들과 일치되어야 한다. 절대적인 빈곤축소를 위해 일치성을 요구하는 주요정책들로는 외채축소, 무역, 투자, 농업, 환경, 이민, 보건조사, 안전보장과 무기판매 등이 있다.

③ 경제성장: 보조, 질과 형평성

- 빈곤축소는 빈곤친화적인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요구한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거시경제정책, 경쟁적 시장과 적극적인 민간부문, 효율적인 정부기구,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 등이 포함된다. 빈곤친화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성장에로의 빈곤층의 공평한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인간능력과 자산에의 접근, 토지, 무역 등과 같은 생산적인 자원への 접근을 포함한 불평등 감소를 위한 개혁이 함께 요구된다.

④ 빈곤축소를 위한 개발도상국가의 정치적 의지

- 빈곤축소는 정치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빈곤자들의 요구(Voice), 민주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빈곤층의 정치적인 권력에의 헌신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와 시민사회내의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세력과의 정치적인 파트너쉽 강화는 사회, 정치적인 개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폭넓은 범위의 국가적인 대화, 빈곤축소에 관심을 가진 자들의 참여는 민주적인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력과 일치되어야 한다.

⑤ 욕구와 실행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고려하는 주요요소

- OECD의 주요자원들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빈곤축소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자원사용에 대한 우선권은 저소득국가들에게 주어지며, 특히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게 먼저 제공된다. 또한 빈곤대책과 관련된 정치적 위원회의 수준과 정부정책의 효율성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⑥ 여러 형태의 지원을 통하여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축소 정책 지지

- OECD는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빈곤축소에 관한 국가목표 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우선권을 둘 것이다. 주인의식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가들은 빈곤축소를 위한 중심축을 제도에서 국가로 이동시켜야 한다. 또한 통합프로그램, 계획과 각 부문의 지원들을 통해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⑦ 효율성 증대를 위한 보다 나은 지원관리

- 효율적인 지원은 협력관계, 공동사업의 수행 및 기술과 자원의 결합과 발전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 석명성(釋明性)과 투명성이 유지됨으로써, OECD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개선된 자신들의 행정능력과 수행이 개발도상국을 돕고 조정하는 각종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으로 단순성과 조화성을 추구할 수가 있다.

⑧ 실행에 대한 평가

- 개발도상국가들간의 강한 협력관계는 대화와 상호신뢰, 그리고 석명성의 조화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가들에게는 위원회의 위임에 동의하고, 빈곤축소의 성취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OECD의 지원국가들은 국가 리더십의 증진, 유연하고 예측가능한 자원의 제공, 장기적인 구조, 공공부문의 개발지원에 정부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실행목표를 개발할 것이다.

⑨ 빈곤축소, 개발도상국가간 그리고 정책일치 목표를 가진 국제기구간 협력 강화

- 비평적인 기구확대의 관점에서 빈곤축소정책에의 통합과 개발도상국가들간의 협력 역량, 정책협조 증진은 개발도상국을 돕고자 하는 여러 국제기구들의 주요 목표이다.

【참고자료 1】

본 자료는 2000년 9월에 세계은행이 빈곤에 관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부문을 요약한 것이다. 이를 통해 OECD와 세계은행의 빈곤에 대한 시각을 함께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빈곤에 대한 2000년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

세계은행은 1990년에 빈곤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후 10년만인 2000년에 지난 10년간의 빈곤에 대한 성과와 세계의 빈곤인구 규모, 향후 빈곤전략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990년의 보고서에서는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경제개방을 통한 노동중심의 성장, 둘째, 빈곤층에 대한 보건과 교육의 기본적인 국가서비스의 제공 및 투자확대를 강조했다.

반면, 2000년 보고서에서는 다양해진 빈곤의 개념을 포괄하며, 새천년을 맞아 빈곤에 대한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빈곤을 축소시키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가 기회의 확대이다. 즉, 빈곤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전기시설, 위생적인 물, 보건서비스 증대 등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성장과 국가적인 인프라구축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빈곤층의 권력확대를 강조하였다. 즉, 현재 세계는 다원화된 사회로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면이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축소를 위해서는 빈곤층이 자신만이 아닌 중산층, 혹은 사회내의 다른 세력들과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연대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Voice), 요구(Needs)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증진이다. 이는 빈곤층에 많은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적인 요소인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 질병, 장애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와 국가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증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3가지 전략을 어느 것에 우선권을 두는 방법이 아닌 모두가 중요한 전략으로서 빈곤축소를 위해 함께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2001-Attacking Poverty*, 2000, 9.

3) '빈곤축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DAC의 빈곤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앞의 9가지 원칙하에 크게 5가지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범주는 먼저 빈곤의 개념과 접근방법, 개발도상국가들간의 주요 이슈, 국가별 프로그램, 정책간 협조와 개발도상국 지원국가의 제도변화 등 5가지를 범주로 삼고 있다. 이들 5가지의 주요 범주는 빈곤축소를 위해 OECD는 물론 국제기구, 주요 선진국 외에 국제기구나 선진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각 범주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빈곤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접근방법들

일반적으로 빈곤은 사회적으로 적정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없는 일정범위의 박탈을 의미했다. 그러나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인간능력의 대부분을 포함하게 되었다. 즉, 소득은 물론 정치권리, 사회 문화적 지위, 권위 그리고 각종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으로 빈곤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빈곤의 원인도 역사, 문화, 지리 그리고 정부의 빈곤정책에 의해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쟁, 군사적 대립, 국가적 위협은 빈곤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이 외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양성불평등, 인구증가, 질병 등의 포함은 빈곤분야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확대된 빈곤을 악화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 때, 먼저 경제성장률의 증가는 빈곤을 축소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성장률은 성장지속성, 성장의 구성, 균형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빈곤친화적인 성장이 중요시된다. 반면에 국가적인 소득불평등과 자산취득에 대한 어려움은 경제성장의 방향과 질을 악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들은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축소를 위한 개혁에 대한 지지와 협력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반면에 빈곤층의 무권력성, 불공정,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영속화시킨다. 따라서 빈곤의 영속화를 피하기 위해 빈곤층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주장과 국가권력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노력해야 한다.

인간개발을 통한 사회개발의 목적은 적정한 수준의 건강, 교육, 깨끗한 물, 위생과 사회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빈곤축소를 위한 직접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즉, 빈곤여성들의 교육확대, 전체적인 성장과 개발 등은 빈곤자들에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효율적인 빈곤축소를 위한 개발도상국가간의 협력 증진

건전하고 생산적인 개발도상국가들간의 협력은 신뢰와 상호 석명성, 그리고 공동목표와 목적을

위한 위임의 나눔을 기본으로 한다. 즉, 개발도상국들간의 협력은 상대국에 대한 법과 책임들에 관한 이해와 상호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로간의 대화들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한 끊임없는 정부간, 정부를 넘어서는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를 넘어서는 논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의회, 지방정부, 빈곤층, 노조 등이 국가 빈곤축소 정책의 형성과 집행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가들은 각국의 정부가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는 서로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지원국가간의 밀접한 협력관계가 요구되는 측면이다.

빈곤친화적인 구조개혁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종종 정치적 어려움을 야기시키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들 역시 이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국가들은 개발도상국가와의 대화를 통해 이들 문제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정치동력에 대한 많은 이해와 개방된 정신을 지닌 그룹과의 협력, 지역적인 제도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구조와 수단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들의 프로그램들은 무엇보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개발체제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통합된 경제, 사회, 환경 등에 우선권을 두며 빈곤축소를 위한 단순하면서 포괄적인 국가정책들이 융합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빈곤축소정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지원기구들은 빈곤의 초점과 국가프로그램의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발도상국들이 빈곤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과 일치하도록 지원국가들의 프로그램들은 일차적으로 빈곤축소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국가들은 각 지역 개발도상국과의 각종 지식공유, 정보분석, 조사 등을 통해 지역적인 정책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프로그램들의 시너지효과 유도를 위한 지원기구들의 선택과 간접적이면서 초점 있는 활동들은 개발도상국 정부와 빈곤축소에 관심을 지닌 단체들과의 대화와 국가적인 요구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원프로그램들은 빈곤친화적인 정책을 위해 개발도상국가와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축소 계획들은 수혜자들에게 복지와 제도들을 통해 지속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국가들의 정책 및 계획은 적은 수의 빈곤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주변제도와 문화 환경은 물론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화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또한 빈곤축소를 위한 개발도상국가들의 능력강화는 기술협력을 위한 중요한 목적이어야 한다. 능력강화를 통한 빈곤축소의 기술협력은 스스로 생기든, 다른 계획에 의해 생성되든 혹은 폭 넓은 분야적 접근이 필요하든지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④ 정책협력의 문제들

빈곤축소를 위해서는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적인 협조가 매우 필요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소득지원국가들의 협력보다는 개발도상국가내의 빈곤축소를 위한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협조는 국내지지자들과 주요 관심들을 포함하는 폭 넓은 정치적 도전일 것이다. 이를 통해 빈곤축소는 다른 국가적 목표보다 중요시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 우선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지원국가들은 개발목적과 실질적인 정책협조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⑤ 사고와 행동방법의 변화

빈곤을 축소시키기 위해 지원국가와 국제기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빈곤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명확한 정책비전, 정책구조 및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축소를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은 개발도상국가내의 조직구조 변화, 더 나아진 협력관계, 기술교류, 개발도상국간의 정보교류 등에 대한 요구를 강조한다.

국제기구들은 정부주도 위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효과적인 빈곤축소를 위해서는 -복합적인 행정과 재정적 요구에 대한 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해- 이들 국가들과의 정책적인 협조와 협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 빈곤축소정책의 광범위한 지지와 실행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시간들과 이들 국가들의 부족한 자원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분권화된 조직과 활동분야에서의 정책결정은 지역적 빈곤조건에 대한 이해와 지역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 5가지 범주의 전체적인 흐름은 빈곤축소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국가의 노력보다는 주요선진국,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빈곤축소에 많은 관심을 가진 시민단체 등의 폭 넓은 참여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축소를 위한 OECD의 가이드라인은 OECD는 물론 기타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세계적인 빈곤축소를 위한 목표와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4. 시사점

오늘날 빈곤의 개념은 OECD의 원칙과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빈곤은 한 국가에 국한되어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경제선진국들은 다양한 협력을 통해 과거의 절대적인 개념에서의 빈곤에서 탈피하여, 빈곤층의 권리 및 평등성 확보,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축소, 빈곤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강조 등을 통해 세계 저소득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추기 위해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빈곤의 다원화 측면에서 과거와 같이 빈곤이 단순히 소득의 상실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탈피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빈곤을 축소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즉, 주거빈민층을 위한 저소득층 최저주거기준의 마련, 장기적인 빈곤층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보장대상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교육 및 의료보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빈민층의 권리성 확보가 중요하다. 과거 우리 나라의 빈곤층에 대한 정책들은 시혜적이고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하지만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빈곤정책이 단순 베풀어주는 차원이 아닌 빈민의 권리와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세계적인 빈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의 시행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담으려 했기에 현재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면에서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여기에 빈곤층,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빈곤대책수립에 있어 국가 혼자가 아닌 사회의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빈곤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부는 홀로 빈곤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들과의 폭 넓은 교류와 토론, 정책개발 등을 통해 향후 빈곤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홍보, 정보공유 등을 통해 빈곤문제가 각 개인들과 떨어진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의 문제, 이웃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주위에 있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세대에 대해 함께 도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국가, 시민단체 등의 공동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2】

다음 자료는 DAC의 2001년 4월회의가 있기전 OECD에서 개최한 빈곤관련 회의자료이다. 여기서는 OECD의 빈곤관련 정책 비교를 위해 본고에 함께 수록하였다.

□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맞서는 정책들

2001년 4월 DAC 고위급회의가 열리기 전인 2000년 10월 9~10일에 영국 London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맞서는 최고정책' (*Opportunity for all-Best Practices in Tackl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이란 주제로 OECD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의 목적은 각국의 관련장관들과 학자, 정책집행자들간의 빈곤정책에 관한 비공식적인 토론을 갖고자 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맞서는 것이 OECD국가들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어느 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저소득, 일을 하거나 배우고자 하는 기회 부족,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은 특정한 그룹 및 지역적인 불이익과 결합되어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가중시킨다고 하였다. 동 회의의 토론은 4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① 고용기회의 증대

- 고용기회의 확대는 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근로가능세대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 밖에 있으며, 고용기회에 대한 장벽과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알선, 어린이 보호, 기초기술습득, 건강증진 등의 개혁적인 정책들을 개발했으며, 이 외에 좀 더 발전적인 것들이 요구된다.

② 안전과 포섭의 증대

- 노동시장에의 접근 증대 그 자체로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어떤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어려운 계층-장애인, 노인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IT산업에의 접근, 자원봉사, 교육, 지역사회에의 참여증진 방안과, 근로참여를 통한 장애인들의 소득보장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③ 문제그룹과 지리적인 지역의 대항

- 모든 국가에서 빈곤은 경제적인 중심부로부터 떨어진 지역 혹은 전통지역으로서 이민자, 토착민지역, 소수민족지역 등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 빈곤문제는 뿌리깊은 문제이며, 따라서 이들 지역과 그룹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합되는 빈곤 정책들이 요구된다.

④ 전반적인 정책개발

-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예를 들어, 유년기의 빈곤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노인세대가 의지하는 연금은 젊은 시절의 고용형태와 연결되어 나타남- 라이프사이클 등을 포함한 정책들이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이고 부분적인 경제-건강,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보호 등-를 넘어서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들은 이들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료: [Http://www.oecd.org/subject/poverty](http://www.oecd.org/subject/poverty)